

청정바다에 한해 2만6713t 버려져...수산물이 신음한다

해양쓰레기 없는 '전남 블루오션'

<1> 전남에 쏟아지는 해양쓰레기

광주일보는 해양환경공단과 함께 전남 해역, 해안, 항·포구 등을 뒤덮고 있는 해양쓰레기 처리 문제를 심층 분석한다. 일본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출 결정으로 바다 환경에 대한 전국민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해양쓰레기의 처리를 위한 공극적인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광주일보는 전남 해양쓰레기의 실태, 바다의 변화를 실감하는 어민들의 우려, 해양쓰레기 처리를 위한 제안 등의 주제로 3차례에 걸쳐 연재한다.

양식어업 증가·외국 반입 매년 증가 지난해 수거·처리량 2만4000t 그쳐 해양 오염·수산물 질 저하로 이어져 수거 국비 지원 늘리고 정화 노력을

협성은 더 높다. 양식어업의 증가, 해수 흐름에 의한 중국 등 외국 쓰레기의 반입, 기후 변화 등의 원인으로 해양쓰레기가 갈수록 증가하면서 해양수산물, 전남도에서도 전전공공하고 있다. 해양쓰레기를 모두 수거·처리하는데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데다 쓰레기 발생 자체를 차단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일단 쓰레기가 해양, 갯벌 등으로 유입되거나 해안, 항·포구 등에 쌓이게 되면 개별 어촌이나 지자체에서 이를 한꺼번에 수거·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된다.

제3차 해양쓰레기 관리 기본계획(2019-2023년)에 따르면 우리나라 연간 해양쓰레기 발생량은 8만4,106t이며, 이 가운데 해상에서 5만444t, 육상에서 3만3662t이 유입됐다.

해상 기인 쓰레기 가운데 어망어구 유실량이 3만 8,105t이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고, 양식장 스티로폼 부자(6,462t), 항만 유입량(5,366t)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현존하는 해양쓰레기는 모두 15만 7,000t으로 추정된다.

전남도의 해양쓰레기 발생량은 연간 평균 2만 6,713t으로, 이 가운데 해상 1만3,694t(51%), 외국 1만2,540t(47%), 육상 479t(2%) 등에서 기인하고 있다. 현존하는 해양쓰레기는 약 8만7,482t으로 추정되며, 6만5,817t(75.3%)이 해저, 갯벌 등에 침적돼 있고, 2만1,370t(24.4%)가 해안에 방치돼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295t(0.3%)은 해상에 떠다니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전남도는 지난 2017년 7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해양쓰레기 발생량 조사 용역을 통해 이 같은 수치를 밝혀냈다.

수산물 생산량이 전국 1위이면서 풍부한 해양자원을 가진 전남도는 전복, 다시마, 미역, 김, 해삼, 돌, 우럭 등 양식어장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관려 폐어구 등과 중국 등에서 밀려오는 쓰레기 유입량도 꾸준히 늘고 있다. 이들 해양쓰레기는 전남의 리아스식 해안(6,753km)과 곳곳의 섬(2,615개) 여기저기에 흩어져 축적되면서 해양 오염, 미관 훼손, 수산물 질 저하 등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전남 어촌이 밀려드는 해양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 해변에 널린 해양쓰레기를 줍는 해남 영천 남전마을 어민들. <광주일보 자료사진>

전남도는 이에 따라 2015년 1만5,735t을 시작으로 2017년 1만9,657t, 2018년 3만2,618t 등 매년 수거량을 늘려가고 있으나 역부족인 실정이다. 수거 및 처리 비용은 매년 증가하지만 열악한 지방 재정으로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할 수 없는데다 발생 원인이 다양하고, 광역 이동성으로 인해 책임 소재 역시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전남도는 해양쓰레기의 경우 재원 및 지원 비용을 기존 균특회계 50%에서 국비 70%로 변경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지역주민, 어업인들의 자

발적인 정화 노력이 더해져야 효과가 빛을 발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전남도는 해양쓰레기 발생량을 2020년 2만 4,000t에서 2022년 2만1,000t, 2024년 1만9,000t으로 감축하면서 수거·처리량은 2020년 2만 4,000t에서 2024년 3만3,000t으로 확대해 해양쓰레기를 줄여나갈 방침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매년 증가하는 해양쓰레기에 대한 획기적인 대책이 시급하며, 이는 수거·처리에 있어 국비 지원을 늘리고, 쓰레기 발생지에서부터 철저한 관리를 통해 해양으로의 유입을 막아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매년 증가하는 해양쓰레기에 대한 획기적인 대책이 시급하며, 이는 수거·처리에 있어 국비 지원을 늘리고, 쓰레기 발생지에서부터 철저한 관리를 통해 해양으로의 유입을 막아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매년 증가하는 해양쓰레기에 대한 획기적인 대책이 시급하며, 이는 수거·처리에 있어 국비 지원을 늘리고, 쓰레기 발생지에서부터 철저한 관리를 통해 해양으로의 유입을 막아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매년 증가하는 해양쓰레기에 대한 획기적인 대책이 시급하며, 이는 수거·처리에 있어 국비 지원을 늘리고, 쓰레기 발생지에서부터 철저한 관리를 통해 해양으로의 유입을 막아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담양 창평국밥거리, 남도음식거리로 조성

전남도, 올부터 2년간 10억 지원 상징물 설치·간판 정비 등 확충

전남도는 18일 "2021년 남도음식거리 조성사업 대상지로 담양 '창평국밥거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담양 '창평국밥거리'는 70여 년 전통을 이어온 시장의 역사성과 창평 슬로시티, 소쇄원 등 담양의 대표 관광지가 인접한 지리적 이점이 있어 좋은 평

가를 받았다. 올해부터 2년간 10억 원을 지원한다. 거리 상징물 설치, 음식점 간판 정비, 보행로와 주차장 확보 등 관광객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주변 환경개선도 추진한다.

담양군은 남도음식거리 조성을 통해 현재 코로나 경기 침체를 겪는 원도심 거리 일대의 경제 회복과 상권 활성화 등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남도음식거리 조성사업은 2016년부터 시작해

순천, 광양, 곡성, 고흥, 보성, 장흥, 강진, 완도, 신안 등 9개소를 완료했다. 목포, 해남, 무안, 영광, 장성 등 5개소는 올해 사업을 마무리해 관광객을 맞이할 계획이다.

곽준길 전남도 식품의약과장은 "남도음식거리 조성사업이 마중물이 돼 새로운 음식 관광지로 자리매김토록 함으로써 남도음식을 계승 발전시키고 지역 경기도 되살아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국제수목비엔날레 '홍보 서포터즈' 참여하세요

SNS에 알릴 기자단 20명 모집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사무국은 '2021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 홍보 서포터즈를 모집한다.

홍보 서포터즈는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 관련 소식을 취재하고 주요 소식을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로 홍보하는 역할이다.

접수 마감은 오는 26일이다. 블로그기자단과 SNS서포터즈 등 총 20명을 선발한다.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응모자격 등을 확인하면 된다. 평가를 거쳐 다음달 4일 합격자를 발표한다.

선발된 이들은 6월부터 10월까지 5개월간 활동한다. 활동 실적에 따라 소정의 원고료가 지급되

며, 팸투어, 비엔날레 무료입장 등 혜택도 주어진다.

2021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는 '오채잔란 모노크롬 - 생동하는 수목의 새로운 출발'이란 주제로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2달간 목포 문화예술회관 일원과 진도 운림산방 일원에서 열린다.

광양, 여수, 나주, 광주에서 특별전시가, 여수, 구례, 보성, 강진 등 9개 시군에서 수목기념전이 펼쳐진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전남도, 중소기업 연구개발 기획역량 강화

6월 4일까지 참여기업 모집

사업컨설팅·교육 등 패키지 지원

전남도는 18일 "전남 중소기업 연구개발(R&D) 기획역량 강화 지원사업의 참여기업을 6월 4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전남 중소기업 R&D 기획역량 강화 지원사업은 인프라가 열악한 중소기업의 R&D 기획역량 강화와 정부 R&D 사업 참여 확대를 위한 것으로 지난 해부터 시작했다.

지원대상은 국가 R&D 사업을 준비하는 전남지역 연구조직(기업부설 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 중소기업이다. 올해 단독기획형 10개사와 협력기획형 10개사 등 총 20개사를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단독기획형은 R&D, 특허, 사업화 관련 전문가 3명이 국가 R&D 사업계획서 작성 컨설팅을 지원한다. 협력기획형은 중소기업이 R&D 사업계획서 작성에 필요한 전문가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기획연구회를 운영하면 된다.

지원을 바라는 기업은 전남도, 전남테크노파크

홈페이지 또는 전남과학기술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면 된다.

전남도 연구바이오산업과(061-286-6633), 전남테크노파크과학기술기획팀(061-729-2973)으로 전화문의도 가능하다.

전남도는 지난해 중소기업 23개사를 지원했다. 이를 통해 지난 4월 말까지 총사업비 32억 원 규모의 국가 R&D 과제 5건이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주순선 전남도 전략산업국장은 "중소기업의 가장 취약한 부분인 R&D 아이템 발굴과 기획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국가 R&D 사업에 도전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해 지역 중소기업의 국가 R&D 사업 참여율을 높여겠다"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인터넷 광주일보

www.kwangju.co.kr

